

검찰 직접수사 축소... 특수부 5곳만

문무일, 국회 사개특위 업무현황 보고 경찰 사법통제 유지... 공수처 도입엔 "국회 논의 결과 존중"

검찰이 주로 대기업과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를 전국 5개 검찰청에 집중하는 등 검사의 직접수사를 축소해 권한을 분산하는 등의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국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내검찰청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했다.

검찰은 그동안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지부서의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직접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고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소추 판단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다만 대형 부정부패 사건 등 고도의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는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고검이 소재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대 검찰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타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사에 한해 삼급 검찰청 승인을 받아 수사하고 이외에는 사법경찰에 범죄정보를 넘기도록 했다.

또 조폭과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

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확대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성과 공정성 등이 필요할 때는 별도 수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수사권 조정 관련 검사의 사법통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치경찰의 수사는 '민주통제'를 우선하고 국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통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에 수사중결권 및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형집행 권한을 이양해 법무부 산하에 형집행청을 신설하는 방안과 불기소권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재정신청 사건의 전면 확대 및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으로 함이 상당하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할 경우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

30대 여성 숨지게 한 목사·어머니 구속

종교의식을 행하다가 30대 여성의 팔과 다리를 묶고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목사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목사 변모(58,여)씨와 어머니 김모(57,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변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9시부터 전주시 노송동의 한 기도원에서 안찰기도를 하며 김씨의 딸인 A(32)씨를 5시간에 걸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적장애 2급인 A씨 안에

귀신이 있다며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안찰기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가 몸부림치자 팔과 다리를 수건으로 묶고 안찰기도를 계속 진행했다.

변씨는 사건 다음날인 15일 오전 8시께 A씨가 깨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법의학 감비빠 골절에 의한 흉부 손상사라는 의견에 따라 변씨와 김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성민 기자

동거녀 딸 성폭행 50대 징역 6년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 딸인 B(14)양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모친에게 합의를 제출과 진술 반복, 국선변호인 해임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혐

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혐의 사실이 사실이면 사형을 시켜달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폭행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딸을 성폭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뿐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고소취소 등을 중요한 점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성민 기자

성매매 남성 금품 훔친 일당 4명 달기

성매매를 빌미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특수강도 혐의로 이모(25,여)씨와 강모(30,여)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강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께 전주시 한 모텔에서 A(59)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든사이 자갑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주인이 예정된 대실 시간이 지

나도 객실에서 나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닷새 만에 대구의 한 모텔에서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들을 구해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불면증이 생겨서 수면제를 갖고 다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 추궁에 "돈을 벌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이성민 기자

전주 열린시민강좌 첫 초청강좌

2018년도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첫 초청강좌가 13일 500여 명의 시민들이 시청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열린시민강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한 수준 높은 전문강의로 유익한 정보와 흥미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전주시민들의 제1순위 인문학 특화시민강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첫 열린시민강좌에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강의하는 소통전문가이자 관공서와 기업체, 대학, 방송 등에서 중형무진 활동 중인 김창욱 강사가 초청돼 '윤택한 소통의 법칙'을 주제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소통의 힘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김 강사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관계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소통과 리더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말씀씨보다는 나와 타인 즉 서로의 진심을 알아듣는 능력이 소통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열등감, 우울함에 빠져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신 안에 숨겨진 내면의 소리 들기와 '나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며 자신과 소통할 때 비로소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8년 전주시열린시민강좌는 오는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운영된다. 매일 둘째·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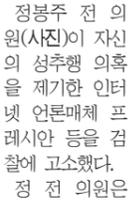
다음 강좌는 오는 27일 김미경 강사의 '나 데리고 사는 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첫 초청강좌가 13일 500여 명의 시민들이 시청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프레스리안' 고소

"낙인 찍히게 됐다... 엄정한 수사 통해 책임자 처벌해 주길 바란다"



정봉주 전 의원(사진)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스리안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13일 오후 3시4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프레스

리안 기사를 이를 그대로 받아온 언론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정봉주 전 의원이 A씨를 만났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매번 바뀌었다"며 "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면 마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난 것처럼 기사를 추가하고 있지만 결국 기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자신과 A씨 친구들의 진술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민국과 라는

인물의 진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프레스리안과 기타 언론사의 보도는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출마선언 시기에 맞춰 의도적으로 작성,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탄압과 허위보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